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김현기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699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1.

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사유

○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31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공기업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6. 3. ~ 6. 7.

○ 제출의견 : 있음

제출자	제출의견(요약)
한성욱 (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 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이번 조례 개정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,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며, 이는 법령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적 과잉 개입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서울시의회는 자율경영과 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2. 서울시는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을 존중하고,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집중3. 일률적인 행정개입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환경을 보장4. 노사자율의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사전검열 시도를 중단
이창범 (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노동 조합협의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동 개정안은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, 실상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, 독립성을 저해하고, 이를 통해 시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며, 이는 행정의 정치화를 위한 수단-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굴욕적인 조항이며, 임직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로 그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이 당장 폐기되어야 함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市 주무부서와 예산, 소송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도·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함

1) 도시철도과-6976(2025.6.4.) “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견 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효과적으로 서울교통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함)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 공사의 예산편성 및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31조제3항은 서울교통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소송업무 등에 대해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임
-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3조제1항은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”²⁾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한편 기구 및 정원, 인사 등 중요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⁾

2) 지방공기업법 제73조(감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따라서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 및 소송업무 등 공사 주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주요 운영상황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 다만, 동 개정안에서 “중요한 사항”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 “중요한 사항”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 할 수 있고, 협의 의무가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운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, 조례가 개정될 경우 조례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개정 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

3)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(감독)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 및 퇴직금규정(명예퇴직규정 포함)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중요한 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